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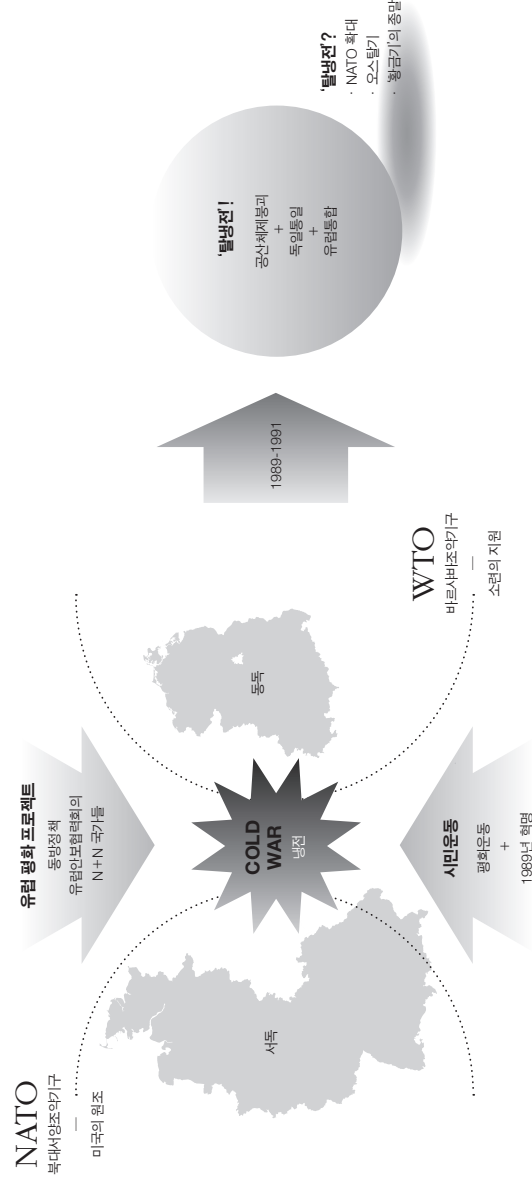
유럽 냉전의 개요

— ‘탈냉전’의 관점에서

The Contour of the European Cold War — from a ‘Post-Cold War’ Perspective

이동기 |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유럽 냉전의 개요



유럽 냉전은

냉전기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이었던 NATO와 WTO의 대결체제로 특징지어졌다. 유럽인들은 냉전 형성과 —독일분단을 포함해— 강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과 소련의 압박과 규정이 항상 따라 다녔지만, 유럽은 독일분단과 동맹체제 형성과 유지 및 재구축에서 능동적인 인지와 적극적인 실천을 보였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능동성이 더 적극적으로 발현된 것은 동방정책과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한 데탕트 정치와 아래로부터의 평화운동이었다. 특히 헬싱키-프로세스는 미국과 소련의 지원이나 양해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유럽 프로젝트였다. N+N 국가들의 평화 가교 역할도 유럽 냉전의 특별한 점이었다.

결국, 유럽 냉전의 발전사는 위기가 공포를 넘어 대안적인 평화구상과 현실적인 평화정치와 구체적인 '탈냉전'의 성취가 함께 따랐다. 그렇기에 유럽 냉전은 열전과 비교되는 '상상의 전쟁'으로서의 냉전 양상을 보여 줄 뿐 만 아니라 평화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유럽의 '탈냉전'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냉전 극복에는 군사적 대결체제의 해체만이 아니라 이질적인 냉전 경험에 대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The European Cold War was characterized by the confrontation between NATO and Warsaw Pact which constituted the strongest systems of a military alliance during the global Cold War. Europe was most definitely in the shadow of the superpowers. But, the Europeans played also a vital role in the form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Cold War regime in Europe, accompanied by the division of Germany. Despite the controls and influences of USA and Soviet Union, Europeans in the West and East developed an awareness about their own thinking and practices in config-

uring the Cold War Europe.

However, the more evident culmination of the active role of Europe in the Cold War was Willy Brandt's pursuit of Ostpolitik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hich represented a strong desire to overcome the rigidities of the bloc system and a European challenge to the excesses of bipolarity. In addition, the European neutral and non-aligned states took an active part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that led to the developments of the 'European project' for peace. They acted as initiators and mediated as coordinator the necessary compromises between East and West. Besides, the European peace movement of the 1980s helped the peace politics continue and formed the foundation for a peaceful end of the Cold War in Europe. In this, the European Cold War was marked not only by the absence of wars. During the epoche of the Cold War, but the Europeans went on creating alternative peace politics, made 'post-cold war' efforts and accomplished remarkable achievements. The history of the European Cold War can be more positively reinterpreted as the development history of peace which could go beyond the 'imaginary war'.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the Cold War in Europe didn't end. To consummate the 'post-cold war' in Europe, one has to learn to communicate rather more on heterogeneous and different life experiences and memories on the Cold War than on the dissolution of the military confrontation system.

KEY WORDS 유럽 냉전 European Cold War,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동방정책 Ostpolitik, 독일통일 German unification, 탈냉전 Post-Cold War, 평화운동 peace movement

우리는 국가의 삶에는 항상 한 가지 이상의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발생한 모든 것을 역사 연구가
우리에게 그저 필연적인 것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 빌리 브란트, 1961년 3월 13일(Hofmann 2007, 181)

I 전제와 관점

미국의 자유주의 역사가 토니 주트(Tony Judt)는 냉전사가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의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개디스 2002)를 비판하며 미국 중심주의적 냉전 이해를 논박했다(토니 주트 2014, 465-481). 그는 개디스가 미국인들에게 “벽난로 옆에서 듣는 해피엔딩의 동화”를 들려주고자 소련의 전략적 속고와 정책에 대해 편협한 정보를 나열했으며 ‘제3세계’에 대해서는 그저 무지와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크게 특별하지 않다. 근대 세계사 서술에서 미국이나 유럽 중심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은 높고 거세다(한국서양사학회 2009). 20세기 후반의 냉전사라고 이를 비켜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냉전시기야말로 서구중심주의 극복의 역사 서술과 인식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다. 왜냐하면 냉전은 애초부터 ‘지구적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냉전은 한편으로는 각 지역과 문화권 사이의 연루와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갖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한 역

사적 배경을 갖고 뚜렷한 지역별 변이와 특성을 보였다. 그렇기에 미국 내지 유럽 중심주의 극복의 관점에서 비서구 세계의 고유한 냉전사 발전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냉전 인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Westad 2007; 권현익 2013a; 권현익 2013b). 탈식민화의 지난한 과제를 안고 출발한 비서구 세계의 냉전사는 사회 내부의 폭력적인 정치갈등과 내전으로 인한 대량살상으로 “한 순간도 휴식을 갖지 못했다”(권현익 2013a, 187). 비유럽 지역의 냉전이 열전과 대량살상 및 그로 인한 정치갈등의 현재적 지속을 특징으로 갖는다면, 유럽 냉전은 사실상 ‘장기평화’(존 개디스), 또는 ‘영속 갈등의 상대적 안정’(요스트 뢰퍼)이었다(Gaddis 1987, 215-245; Dülffer 2006, 51).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트는 유럽인들의 냉전 경험이 미국인들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강조하면서 결코 단일한 ‘유럽 냉전’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체코,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 유럽 국가들은 각기 고유한 정치적 조건과 문화사적 배경을 갖고 저마다 다른 냉전 경험을 가졌다. 문제는 경험사적 영역을 넘어 최소한 체제나 국제관계의 차원에서 과연 ‘유럽 냉전’의 역사를 따로 설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국제 냉전사에서 더러 ‘유럽 냉전(European Cold War)’ 또는 ‘유럽에서의 냉전(Cold War in Europe)’, 또는 ‘냉전 유럽(Europe in Cold War)’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냉전의 유럽적 맥락과 발전사를 따로 다루는 연구도 적지 않다(Dülffer 2004, 123-135; Bozo 2008). 그러나 ‘유럽 냉전’ 개념이나 지평이 엄밀하게 정의 내려진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유럽에서의 냉전 발전은

단지 유럽적 차원을 넘어 이미 압도적인 국제정치적 영향을 발휘하고 세계사적 함의를 지니며 그 자체로 냉전의 지구적 현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와 같은 인습적 유럽 중심주의를 넘어서 타 지역과 문화권의 냉전과 비교해 유럽 냉전의 고유한 발전사를 서술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냉전은 그 자체가 이미 국제적 현상이며 ‘시기(epoch)’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현상으로 한정짓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럽 냉전’이 시종 고유하고 특징하게 형성되고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유럽에서 냉전은 항상 국제적 연루와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했다. 20세기 후반 세계사의 초국가적 ‘상호작용’과 복합적 연관관계를 배제하면 유럽의 냉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Iriya 2014). 특히 미국과 소련은 연합국으로서 2차대전에서 유럽 국가들과 함께 나치 독일과 맞서 싸웠고 전후 유럽 질서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기에 유럽 냉전을 설명하면서 미국과 소련을 바깥에 세워 두기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냉전’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이유는 둘이다. 먼저, 전후 유럽에서는 1955년까지 각기 미국과 소련의 헤게모니에 기초해 강고한 군사동맹체제, 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Warsaw Treaty Organization)가 형성되었고, 그 후 동맹체제에 입각한 특수한 방식의 위기와 갈등이 나타났다. 동시에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유럽적 맥락과 틀에서 독특한 데탕트와 평화정치의 국면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와 영향 속에서 유럽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1989-90년 냉전체제를 전면적으로 극복했다. 이

렇게 고유한 군사동맹체제에 입각한 유럽 냉전 대결과 위기에 주목하고 아울러 그 극복의 과정과 결과, 즉 ‘탈냉전’의 특정한 발전사를 냉전 이해의 관점으로 포괄한다면 제한적으로 ‘유럽 냉전’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¹

II 유럽 냉전체제의 특징

1. 냉전의 ‘중심’, 또는 ‘중요한 일부’?

오랫동안 국제냉전사 연구자들은 유럽의 냉전을 세계 냉전의 본령 내지 ‘중심’으로 인식했다. 유럽에서 벌어진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체제 대결과 국제 정치갈등 그리고 NATO와 WTO 체제 간 군사긴장은 냉전의 ‘전형’이면서 동시에 냉전 발생과 발전의 ‘중핵’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그런 인식에 따르면, 비유럽 지역의 냉전은 이 ‘중심’의 냉전에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좀 다른 발전 과

1 국제냉전사에는 냉전을 단순히 국제정치적 대결로 보지 않고 사회와 문화, 학문과 지식 생산, 기술 발전과 일상 경험에서도 발현된 일종의 ‘총력전(total war)’으로 보며 전체사(Gesellschaftsgeschichte, History of Society)로 관점을 확장하는 큰 흐름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국가나 정치지도자를 넘어 다양한 행위자와 조직들에 주목하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관점의 냉전사 또한 각광받고 있다(Niedhardt 2010, 557-561; Westad 2000, 551-565). 그와 같은 전체사 내지 초국가적 관점의 냉전사는 한편으로는 유럽과 비유럽의 경계를 뛰어 넘으면서 동시에 — 토니 주트가 놓친 — 새로운 유럽적 맥락과 차원의 동시성과 연루의 발전사를 포착할 수 있다(Scott-Smith 2003). 이 글은 지면상의 제약으로 그와 같은 분석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유럽 냉전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테탕트와 평화운동 등의 ‘탈냉전’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정을 보인 ‘주변’의 현상이었다. 심지어 최근의 냉전사 연구에서도 이 인습적인 인식들은 여전히 강세를 발휘하고 있다(Stöver 2007).

‘유럽 냉전’을 국제 냉전의 ‘중심’으로 간주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이 곳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무장이 가장 강렬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있다. 유럽 대륙에서 핵무기로 무장한 양 군사동맹의 직접적인 대결체제는 그 가공할 파괴의 잠재력으로 다른 지역의 군사긴장을 넘어 냉전의 위험성을 — 비록 ‘상상의 전쟁(Kaldor 1990)’에 국한되었지만 — 대표하는 것으로 인지되었다.

게다가 전후 국제 냉전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유럽은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명료하게 냉전으로의 정치결정이 진행되었던 곳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1948, 49년 ‘제1차 베를린 위기’는 독일과 유럽 지역에서의 미국과 소련 간 대결 의도와 갈등양상을 명료하게 드러낸 실제 행동이었다(Lemke 2001). 1947년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과 마셜 플랜(Marshall Plan) 및 서독 지역의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통합 강화 그리고 소련 측의 체코슬로바키아 내정 개입을 통한 공산정권 창출과 코메콘(COMECON, 상호경제원조회의)의 창립 등의 과정은 1948년 6월 24일 소련의 베를린 봉쇄와 이에 대응한 서방측의 항공수송으로 이어져 국제 냉전의 개시를 명료하게 드러냈다.

10년 뒤 다시 등장하는 ‘제2차 베를린 위기’와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의 등장은 분단독일과 분단 베를린이 유럽 냉전의 잠재적 화약고임을 과시했을 뿐 아니라 유럽에서 냉전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미국과 소련의 직접 (핵)무장 대결로 치달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양측 모두 베를린의 포기나 양보는 냉전에
서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했기에 베를린에서 냉전 대결의
동력은 특별하게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1차 베를린 위기’ 때
미국은 심지어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 ‘제2차 베를린
위기’ 때에는 베를린에서 소련과 미국의 탱크가 직접 대치하며 며
칠 동안 긴장을 최고로 올렸다.

요컨대, 독일과 유럽은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군
사적 대치의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현상이었기에 다른 지역과는 달
리 항상 냉전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서유럽과 동유럽의 국가들은 각각 외면상 ‘자유주
의적’ 자본주의와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가 급속도로 확립되었고
이데올로기적 대결과 체제 경쟁의 양상을 전면화했다. 이러한 점
에서 유럽 냉전 ‘체제’는 국제 냉전의 ‘전형’으로 간주되기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유럽 냉전의 이와 같은 군사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양상만으로 유럽을 냉전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것
은 유럽 냉전의 특별한 성격으로 인지될 수 있을 뿐이다. 국제 냉
전의 다양한 지역적 전개과정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 맥락 하에서
유럽 냉전의 고유성을 찾는데 ‘중심’과 ‘주변’의 구분은 오히려 방
해가 된다. 그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은 이미 냉전을 특정하게 전제
할 때에만 가능하며, 그것을 통해서 여타 지역의 냉전 이해를 흐리
기만 할 뿐이다. 아울러 유럽 냉전의 ‘중심’적 성격을 부정한다고
해서 여타 특정 지역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 올리거나 새로운 ‘전
형’으로 제시하는 것도 유익하지 못하다. 당분간은 ‘중심’과 ‘주변’

의 구분을 접고 각 지역 냉전 발전의 고유한 동력과 특이한 양상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럽이 국제 냉전의 형성 초기 미국
과 소련의 외교정책이 가장 격렬히 부딪힌 대결의 장이었고 양국
상호간의 ‘봉쇄’ 정책이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된 곳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기에 유럽 냉전은 국제 냉전 발전의 ‘중심’
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부’라고 규정할 수 있다.

2. 독일분단

유럽 냉전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유럽의 전통적 열강이었던 독일
의 분단으로 유럽 분열이 확정되었고 그 양상이 규정되었다는 사
실이다. 1945년 패전국이자 전범국으로서 독일은 전승국의 군정
하에서 ‘탈나치화’ 과정을 겪어야 했으며, 주권 상실의 상당 기간
을 감수해야 했다. 1949년 독일에서는 두 개의 국가가 건국(이중
건국)되면서 분단이 확정되었다. 1947년부터 진행된 국제 냉전 또
는 유럽 냉전의 가속화 과정에서 독일은 단일국가로의 발전에 실
패했던 것이다. 애초부터 전승 연합국이 독일분단을 목표로 전후
유럽정책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었다(Schwarz 2010, 137-149). 미
국과 영국의 정치지도부에서도 1947년까지 군사적 중립을 전제로
한 단일 독일국가 구상이 논의되었다. 그 후에도 미국과 영국에서
는 소련과의 합의를 통한 단일 독일국가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
로 등장했다. 그러나 중립 독일이 결국에는 공산화가 되고 말 것이
라는 우려로 서방 연합국측은 점차 동서독 분단을 받아 들였고 독
일분단에 기초한 유럽 분열을 전후 유럽 질서로 확정지었다. 이 과

정에서 서독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줄곧 소련과의 타협을 거부했고 확고한 서방통합으로의 길을 주장했다. 그는 독일분단을 감내하며 서독을 서방 친화적인 중핵 국가로서 건설할 것을 자신의 정치 이념으로 내걸었다.

반면, 소련의 스탈린은 루르 지역의 서독 산업 기반으로부터 전쟁 배상을 받을 목적과 미국이 지원하는 서방 통합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립화 통일독일을 시종 내세웠다. 1952년 3월의 '스탈린 각서'는 1949년을 전후로 소련이 궁리하던 독일 중립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었고 진정성이 없지 않았지만 서방 연합국과 서독은 냉담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공산주의 위협의 현실화는 스탈린의 제안을 한낱 서방통합을 방해하려는 공산주의 선전 술책으로 보이게 했을 뿐이다. 사실 당시 스탈린은 더 명확하고 단호한 타협 의지를 보이지 못했다. 게다가 동독의 지배자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이하 사통당)의 일당독재 구상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독일혁명의 꿈을 접지 않았다. 그는 스탈린의 중립 독일 구상에 직접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동독체제를 이미 소비에트화함으로써 스탈린의 제안을 무용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Loth 2007).

독일분단은 이렇듯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냉전 대결의 필연적인 발전의 결과라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구상들의 조응과 부조응의 산물이었다. 이때 특히 소련과 미국만이 아니라 서독과 동독의 정치엘리트들, 특히 아데나워와 울브리히트의 역할 또한 독일분단의 등장과 고착화에 매우 중요했다. 물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독일 내에서도 '단일한 독일국가' 구상들, 특히 중

립주의 지향이 강력했다는 사실이다(Gallus 2006). 중립주의 통일독일 구상은 서독 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호응을 불러 일으켜 한때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또 두 번의 패전 끝이라 독일, 특히 서독에서는 전통적인 군사주의적 권력국가로부터의 거리두기가 일어났고 반군사주의 지향이 확산되었다. 1950년대 내내 서독에서는 재무장과 병역 의무 도입 및 서독 연방군(Bundeswehr)의 핵무장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꽤 높았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인들은 반공주의 정서와 서방통합을 통한 삶의 안정과 경제적 복리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그렇기에 그들은 냉전과 분단의 강화정책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아데나워에 정면 도전하지 않았고 모험적 안보정책을 따르지 않았다.

한편, 독일분단의 확정과 강화는 이제 유럽의 분열과 냉전을 돌이킬 수 없음을 의미했다. 독일분단은 그 자체로 유럽 냉전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유럽 냉전의 양상을 특징지었고, 유럽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독일의 분단은 유럽 냉전의 축쇄로 기능했다. 향후 긴장과 위기도 주로 독일에서 비롯될 것이며 긴장완화와 위기극복도 독일 땅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독일문제'는 다시 유럽문제가 되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독일분단의 구조적 특수성이 유럽 내 동서 진영 간 힘의 균형과 동서독 간 힘의 불균형의 이중적 차원에

2 예를 들어, 서독의 여론조사에서 병역의무를 무조건으로 지지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 병역의무에 대한 반대 비율은 1950년대에 60%를 오갔으며 1960년대에도 40%를 항상 넘었다. 또 서독 연방군 핵무장에 대한 반대 여론 비율은 1955년부터 1965년 사이에 49%에서 63% 사이를 오갔다(Geyer 2001, 376-408).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유럽에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진영 간의 외면상 힘의 균형체제하 동서독 간의 실질적 불균형이 동서독 관계를 규정했다. 영토와 인구 및 경제력의 규모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안정과 생활수준 등에서도 동서독 간 불균형은 시종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서독은 서방통합의 길을 통한 국제 정치상의 안전확보와 위상제고 그리고 한국전쟁을 기회로 확보한(‘코리아 붐’) 경제재건으로 번영과 복리를 구가하게 되었지만, 동독은 분단시기 내내 상대적 불안정과 허약함 속에서 소련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유럽적 차원의 국제적인 힘의 균형과 분단독일의 양국간 힘의 불균형의 동시성은 냉전과 분단 시기 내내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3. 동맹체제

1949년 4월 4일 NATO의 발족은 유럽 냉전 형성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냉전의 군사화는 애초 독일에 맞선 상호방위를 내용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동맹에서 출발했다. 1944년 12월 프랑스는 소련과 동맹조약을 체결했고, 1947년 3월에 영국과 프랑스는 반(反)독일적 성격을 지닌 덩커크 조약(Treaty of Dunkirk)을 체결했다. 그것은 1948년 3월 확대되어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도 함께 참여하는 브뤼셀 조약(Treaty of Brussels)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1947년부터의 미소 간 전후 유럽 건설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등장하고, 특히 1948년 6월부터 제1차 베를린 위기가 발생하면서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체제의 필요성이 확산되었다.

1949년 NATO 발족에는 당시 브뤼셀 조약 참여국 5개 국가 외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캐나다 그리고 미국 등 12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1952년에는 터키와 그리스, 1955년에는 서독이 연방군을 창설하면서 추가로 가입했다(이근욱 2012, 56-57; 이수형 2012, 97-117).

이에 맞서 소련은 동유럽 국가 7개국, 즉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알바니아를 결집해서 1955년 5월 WTO를 결성했다. 소련은 이미 1945년부터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동맹조약을 통해 개별 회원국가의 군사력을 통제하고 긴급한 정치상황에는 —군사적 상황뿐 아니라 이른바 ‘사회주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회원국가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이른바 ‘브레즈네프 독트린’)와 명분을 확보했다. 다시 말해, 이 안보동맹은 군사적 의미만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지니기도 했다.

한편, 양 안보동맹체제가 다른 지역의 여러 군사동맹에 비해 특별한 것은 미국과 소련이 각 동맹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양국의 무기경쟁, 특히 핵무기 개발 경쟁은 NATO와 WTO의 군비대결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에 유럽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핵전쟁’의 공포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1961년 베를린 위기시 양 동맹은 동원체제와 군사연습으로 공포의 정점을 만들었다.

다른 한편, NATO와 WTO의 발전을 미국과 소련의 압도적 영향의 결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먼저, 주목할 것은 NATO 결성은 미국이 아니라 서유럽 정치지도자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외무부장관 베빈(Ernest Bevin)이 대서양 군사동맹 건설을 제안했을 때 트루먼 행정부는 주저했다. NATO 결성 초기에는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서유럽 국가들이 진정한 주체였던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는 NATO 결성 후 시종 독자적인 민족 입장과 ‘유럽 이익’을 내세워 미국의 헤게모니에 저항했다. 1958년부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제3의 블록 유럽’을 내세우며 프랑스를 미국을 대신할 주도국으로 제시했다.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은 1966년 프랑스의 NATO 탈퇴로까지 이어지면서 동맹 내 규율과 연대를 흔들었다.

WTO 안에서도 마찰과 이탈은 적지 않았다. 1956년 헝가리는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WTO로부터의 탈퇴와 중립을 천명했다가 소련의 개입으로 철회했다. 1958년에는 루마니아가 소련군 철수와 동맹탈퇴를 선언했다. 1961년에는 알바니아가 —중소 분쟁의 맥락에서— 이미 WTO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1968년 체코에 대한 소련의 개입을 비판하며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물론, 이런 이탈과 마찰에도 불구하고 양 안보동맹의 대결체제는 1989-91년 동유럽과 소련의 공산체제 몰락까지도 유지되었다. 그렇기에 동맹질서 내 이탈과 마찰을 과대해석할 수는 없다. 막강하고 단일한 것처럼 보였던 양 동맹질서 내에 균열과 이탈이 존재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동맹질서에 편입되지 않았던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의 존재다. 스위스와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는 유럽에서 이른바 중립-비동맹(N+N: Neutral and Non-aligned) 국가로서 냉전 유럽에서 ‘제3의 세력’을 형성했다. 그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유럽에서 동맹체제의

긴장을 완화했지만 냉전기간 내내 다양한 방식으로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유럽 냉전의 극복을 보조했다(Nünlist 2010, 22-24).

III ‘평화사’의 관점에서 본 유럽 냉전

1. ‘평화사’의 관점

비유럽 지역에 비해 유럽 지역이 사실상 ‘장기평화’였고 ‘갈등의 상대적 안정’이었다고 해서 폭력과 무력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3년 동독, 1956년 헝가리, 그리고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을 소련 탱크가 짓밟은 역사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서유럽의 안정과 안보를 직접 위협하지 않았고 더욱이 서유럽에서의 미국 헤게모니에 도전하지 않았다. 당시 소련이 미국 또는 서유럽과의 물리적 충돌을 애써 피하려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동유럽의 소련 탱크는 결국 소련 ‘제국’ 내부의 일이었을 뿐이었다.

특히, 유럽 냉전을 비유럽 지역의 열전 또는 폭력 발현과의 비교가 아니라 1990년 평화적인 유럽 냉전 종식의 사후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에 대해 더 적극적인 평가도 가능해진다. 1990년 11월 19-21일 파리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참가국 정상들은 “유럽의 대결과 분열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유럽이 평화의 공간임을 자랑했다(이동기 2013a, 236). 이 탈냉전 선언의 역사적 무게를 고려해 유럽 냉전을 다시 보면 유럽에서 발생했던 다양

한 평화사상과 운동과 정치의 역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평화사(peace history)’의 관점에서 유럽 냉전의 복합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사유할 때 가능하다(이동기 2014).

‘평화사’의 관점에서 유럽 냉전사를 본다는 것은 반(反)냉전과 탈냉전 평화흐름의 역사를 단지 데탕트로 알려진 국제정치의 합의에만 국한하지 않고 냉전기 유럽의 다양한 평화지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1963년부터 유럽에서 데탕트와 평화공존의 국제정치가 정착된 과정과 1969년부터 성공적으로 발전한 서독의 동방정책, 그리고 1975년부터의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정례 회합이 지닌 의미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의 전사와 영향이 사회영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위주체들에 의해 발휘되었던 과정을 유럽 냉전사의 에피소드나 주석쯤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정치적 평화합의와 공론장, 또는 반(半)공식적 영역의 평화지향 사이의 연관관계가 고려되어야만 냉전 극복의 총체적 과정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유럽의 냉전사 서술이 데탕트의 국제정치를 넘어 1950년대와 1980년대 초의 평화 운동과 사상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Bald 2008; Bald 2010; Gassert 2011; Nehring 2013).

2. 동방정책과 유럽안보협력회의

그렇더라도 1970-80년대 동방정책과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발전은 ‘평화사 관점’의 유럽 냉전사 인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1958년에서 1963년까지의 베를린 위기와 1962년 쿠바 핵위기 그리고

1961년 8월 동독의 베를린 장벽 건설은 미국과 서독의 정치지도부에게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자극했다. 1963년 6월 10일 워싱턴에서 케네디가 소련과의 군축협상을 염두에 두며 제시한 ‘평화전략’은 냉전 대결의 조정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Nikita Khrushchyov) 서기장도 ‘새로운 정신’을 내세워 이에 조응했다. 데탕트로의 발전, 특히 미국의 ‘평화전략’은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와 그의 참모이자 동지였던 에곤 바르(Egon Bahr)에게 중요한 자극이자 도움이 되었다(Hofmann 2007; Loth 1998, 104-105).³

케네디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브란트와 바르도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방과 압박을 통한 체제붕괴 전략이나 해방구상이 실패로 끝났으며, 평화공존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케네디의 ‘평화전략’은 주로 유럽의 전후 질서, 즉 현상인정을 통한 데탕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대가로 베를린과 독일문제에 있어서는 소련에 양보, 즉 베를린 장벽을 묵인하고 오더-나이제(Oder-Neiße) 국경을 인정할 의향을 내포하고 있었다. 반면, 브란트와 그의 참모는 데탕트를 통한 현상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런 의미에서 서독 동방정치가들에게는 ‘현상을 극복

3 케네디의 ‘평화전략’과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았다. 브란트가 케네디의 ‘평화전략’을 서독에 그대로 이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미 1950년대 후반 브란트는 서베를린 시장으로서의 경험을 배경으로 새로운 ‘독일 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Schmidt 2001). 그러나 1963년까지 브란트의 ‘독일 정책’ 전환은 1963년까지 아직 그 방향이 명료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1963년 당시 케네디 행정부가 브란트에게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Hofmann 2007, 175-176). 구상의 차원에서는 브란트가 앞섰지만 그는 점차 케네디의 정책에 조응해갔다. 아울러 브란트와 케네디는 서로 의존하며 영향을 주고 받았다.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상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모토가 새로운 사고의 출발점이었다. 공산주의의 극복은 위협이나 압박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하고 협상함으로써('접근') 그 체제가 스스로 바뀌도록('변화') 유도해야 한다는 정책을 브란트와 바르는 '접근을 통한 변화'라고 불렀다(이동기 2013a, 159-171; 이동기 2013b, 154-156). 1963년 말 그들은 동독 정부와의 길긴 협상을 통해 '통행증 협정'을 이루어 냈다. 동서 베를린 주민들은 다시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서독 동방정치가들은 이 정책 경험에 기초해서 '현실적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분단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분단으로 인한 사람들의 구체적 고통과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에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1969년 집권한 브란트 총리는 1972년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했고, 소련과 폴란드 및 체코와 조약을 체결하며 관계정상화를 통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흔한 오해와 달리, 1970년대 미국 정치지도부와 서독의 평화 정치가들이 항상 서로 조용하고 협력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과 그의 참모이자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서독 사민당 정부의 동방정책(즉 '신동방정책')을 지지하면서도 항상 그것이 독일의 독자적인 길, 다시 말해 NATO로부터의 탈퇴를 겨냥한 독일 민족주의나 유럽 중립주의로의 길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다. 동방정책은 그와 같은 '제3의 길'을 애초부터 배제했고 '서방통합'을 의문시하지 않았다(Hanhimäki 2010, 198). 하지만 동방정책을 통한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서독의 활약은 이

미 유럽 냉전(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데탕트)의 국제정치가 미국과 소련의 양극 중심적 성격을 상실해 갔음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었다.

더군다나 서독의 동방정책은 단순히 냉전 대결의 완화와 분단 갈등의 조정만을 지향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의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화해의 노력이었으며, '현재'의 안보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고, 동시에 유럽 공동의 '미래'을 위한 전망을 포괄했다. 그런 점에서도 그것은 냉전시기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데탕트'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그것은 더 혁신적이었으며 복합적이었다. 그리하여 서독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데탕트 정치에 뒤늦게 뛰어 들었지만 1970년대 초부터 유럽 평화정치의 선두에 서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었다.

게다가 1960-70년대 미국과 소련 두 초열강의 데탕트 정치가 국제질서의 안정을 지향했던 것과 비교해 서독과 서유럽 평화정치가 안정을 통한 역동적 변화전략을 목표로 했다는 점은 거듭 중요하다(Hofmann 2007, 177-181). 서독과 서유럽의 평화정치가들은 동독과 동유럽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현상유지를 넘어 유럽 냉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했고 그 결과가 바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였다.

서유럽 국가들이 애초부터 데탕트의 원칙과 방향에 합일된 의견을 갖지는 못했다. 다만 서유럽 정치가들은 1961-62년 미국과 소련이 초래한 위기를 지켜보며 무력한 국외자로서의 소외감을 가졌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한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서유럽 정치가들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

전 대결과 위기가 자국의 안보와 경제이익에 직접 조종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심각하게 침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Hanhimäki 2010, 201-203). 드골 주도 하의 프랑스는 NATO로부터 탈퇴하며 미국과 구분되는 유럽 독자노선을 주장했고, 서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선보였다.

한편, 동유럽과의 관계에서도 서유럽 국가지도자들은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성과에 고무되어 독자적 외교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동유럽 국가들도 서유럽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 1966년 여름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은 ‘부카레스트 선언(Bucarest Declaration)’을 발표해 유럽공동안보회의를 요청했고, 1967년 NATO 회원 국가들도 하르멜 리포트(Harmel Report)를 채택하며 협상 의지를 천명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의 데탕트 정치를 자신들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후 탄생한 체제와 국경을 서방으로부터 보장받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지해 환영했다. 그런데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준비하면서 애초 소련이 1950년대 중반부터 시종 요구했던 유럽안보회의의 어젠다, 즉 폭력포기, 국경과 영토 인정 및 경제협력을 수용하며 ‘정보 교환과 문화 접촉’의 요구로 확대했다. 또 서유럽의 정치가들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게 국경 인정과 체제 존중을 보장하는 대가로 인적접촉과 정보 교환을 넘어 인권의 보편적 요구를 합의의 핵심사항으로 관철시킴으로써 냉전 질서의 해체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1975년 여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유럽 양 진영의 35개국 정상들은 그렇게 ‘인권 존중과 국경

및 체제 존중’을 맞바꾸며 협력을 제도화했다. 뒤이은 후속회담들, 즉 베오그라드(1977-79)와 마드리드(1980-83), 스톡홀름(1984-86)과 빈(1986-89)을 거쳐 1990년 11월 말 파리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고위정치가들은 질긴 회담을 통해 유럽을 ‘평화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을 지속했다. 특히 협상 초기 미국의 우려와 소련 지도부 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된 유럽안보협력회의는 ‘유럽의 재탄생’ 과정이었다. 미국과 소련 양자간의 데탕트 정치가 주로 핵무기 제한문제나 안보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유럽안보협력회의는 그것을 넘어 ‘인간안보’를 주제화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유럽 데탕트는 무엇보다 유럽 프로젝트였다”(Hanhimäki 2010, 198).

물론, 이 ‘헬싱키최종의정서’가 그 후 유럽 냉전의 역동적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합의 조항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다. 1975년 당시 헬싱키 회의에 참석했던 유럽의 정치가들은 누구도 바스켓 I의 제7원칙인 ‘인권존중’ 조항과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규정을 담은 바스켓 III이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와 유럽 냉전 해체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Loth 1998, 9-19; Hanhimäki 2010, 214). 당시에는 오히려 “소련의 외교적 승리”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단지 동독과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이 조항의 심각성을 인지해 거부 태도를 밝혔지만 소련의 무마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인권 존중’과 ‘인도적 교류’ 구절에 주목한 이들은 동유럽의 반체제 운동 세력들이었다. 그들은 서유럽의 인권단체와 평화운동 세력과 연대하며 ‘아래로부터의 헬싱키’를 발진시켰다.

3. '약자의 위력':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이미 강조했듯이, 유럽의 일부 N+N 국가들은 일찍부터 냉전 대결을 완충하고 동서 양진영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그중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는 특별했다. 먼저, 오스트리아는 전후 연합국의 분할 점령 통치가 반드시 민족 분단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물론, 냉전 초기 분할 점령국 오스트리아 또한 냉전의 격전장이자 '체제 대결의 실험실'이었다. 그렇지만 1955년까지 10년 동안의 연합국 점령이 끝나면서 오스트리아는 연합국들과 '국가조약'을 체결해 '영구중립'을 조건으로 주권을 되찾았다. '중립'은 오스트리아 내정의 발전을 반영하기 보다는 소련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1955년 소련은 '서오스트리아'가 NATO에 가입했을 때 서독에서 '서오스트리아'를 거쳐 이태리로 이어질 NATO의 방어선을 용납할 수 없었다. 또한 소련은 오스트리아가 중립국이 되면 향후 서유럽 국가들이 NATO로부터 이탈하는데 좋은 선례가 되고 평화공존의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스트리아 정치가들은 중립적 지위를 활용해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발전시켰고 경제협력, 즉 '동방무역'을 강화했으며 정례 접촉을 만들었다.

그러나 외교나 안보 문제와는 달리 오스트리아의 정치·경제 제도와 사회문화는 서유럽을 따랐다. 군사적 중립하에서 계급투쟁을 강화하고자 했던 소련의 기대와는 달리 오스트리아 정치가들은 서유럽 민주주의 정치·문화와 삶의 가치를 내면화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인들은 혹시라도 WTO로부터 외침을 받으면 미국과 서

방측이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군사적 중립과 소련과의 친교에 기초해 국제정치상으로 양진영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했다(Suppan 2009; Mueller 2009, 11-19). 냉전기 각종 조정과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빈번히 열린 곳은 무엇보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었다. 이를테면, 1961년 6월 초 냉전 위기 격화 와중에 케네디와 흐루쇼프는 바로 빈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 앞서 다룬 헬싱키 회의의 준비 회담이 열린 곳도 여기다. 오스트리아는 군비를 현저히 감축하고 경무장에 한정하며 유럽 평화를 위한 중심 거점이 되고자 노력했다.⁴

게다가 오스트리아는 지리적인 인접성과 개방적 문화로 인해 동유럽 주민들에게 큰 의지가 되는 곳이었다. 1956년 헝가리와 1968년 체코 봉기시에 정치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곳도 바로 오스트리아였다. 1989년 '철의 장막'에 균열이 생긴 것은 바로 오스트리아가 헝가리와 국경을 개방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은 오스트리아가 오랫동안 헝가리를 비롯한 주변 동유럽 국가들과 선린관계와 교류협력을 지속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냉전기 유럽에서 중립 오스트리아의 존재는 동·서유럽 모두에게 이미 탈냉전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약자의 위력'을 통한 그 가교 역할에 대해 집단적 자의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4 이를테면, 1960, 70년대 오스트리아는 GDP의 1% 정도를 군비 예산에 사용하였다. 오스트리아의 1인당 국방비는 20달러도 되지 않았다. 스위스는 68달러였고 스웨덴도 128달러였다. 대다수 오스트리아인들은 군비 강화가 오히려 안보에 위협에 된다고 생각했다(Mueller 2009, 19).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관련해서라면 핀란드는 오스트리아보다 더 중요했다. 1969년 5월 핀란드 정부는 앞서 WTO가 말을 꺼낸 유럽공동안보회의의 소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서유럽 측에 헬싱키에서 회의를 주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그 회의를 위해서 동·서유럽 모두 어떤 전제조건을 내걸어서도 안 되며 미국과 캐나다의 참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나름의 중재자 및 준비자의 역할을 수행했다(Seppo 2006).

핀란드가 유럽 평화의 중재와 가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소련으로부터 더 거리를 두고 원래의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1973년까지 핀란드는 동서독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이 중재역할을 통해 그것에 걸맞는 외교적 지위의 강화를 노렸다. 당시 핀란드 정치가들, 특히 울호 케코넨(Urho Kekkonen) 대통령은 서독과의 관계 정상화를 노렸는데, 그것을 통해 자국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실익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마치 서독이 동방정책을 통해 자신의 외교적 위상을 올리고 독자성을 강화했던 것처럼, 핀란드 또한 유럽 데탕트 국면에서 능동적 행위주체로 나서 중립 지위를 강화하며 냉전 극복의 새로운 주체로 나섰던 것이다. 이렇듯 냉전을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평화정치의 맥락 속에서 유럽 국가들은 각기 고유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통해서 새로운 역동성과 활력을 찾아 나갔다.

IV 1980년대 ‘핵위기’와 평화운동

1. 재무장과 ‘핵위기’

1979년부터 1980년대 전반기 동안 미국과 소련은 다시 한 번 냉전 대결로 치달았다. 데탕트가 곧장 양 열강의 전략적 경쟁과 지역 차원의 이익추구를 억제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소련은 당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미국 카터(Jimmy Carter) 행정부의 인권정치, 특히 ‘제3세계’에서의 인권정치는 국제 데탕트의 외면적 균형을 흔드는데 기여했다. 그렇기에 긴급한 위기는 먼저 비유럽 지역에서부터 일어났다. 1979년 12월 24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뒤이은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1979년 2월 호메이니(Ruhollah Mussavi Khomeini) 주도하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선포와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직원의 인질 억류 사태 등은 소련과 미국으로 하여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들었다. 특히, 카터 대통령은 인권 공세와 평화정치 사이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베트남 전쟁 후 미국의 수세적 지위에 대한 압박으로 집권 말기에는 오히려 소련의 위협을 과대 해석하며 반소 공세로 내몰렸다(Mitchell 2010, 66-88). 더욱이 1981년 공화당의 보수 정치가인 레이건(Ronald Reagan)은 대통령에 취임한 뒤 곧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하며 소련을 상대로 강경한 군사력 증강경쟁을 가동했다.

유럽 또한 이 ‘제2차 냉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국제적 긴장 앞에서 유럽 데탕트 정치는 위축되었다. 그러나 비유럽 지역의 폭력갈등이 유럽에 영향을 발휘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럽인들이 이 국제위기의 또 다른 발원지인 동시에 적극적인 해결자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재무장이 문제였다. 1970년대 후반 소련이 중거리 미사일을 현대화하자 이에 대해 일부 서유럽 정치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사정거리 5,000km에 달하는 소련의 신형 SS-20 미사일에 맞서 미국과 주요 서방 국가들은 1979년 12월 NATO ‘이중결정’을 통해 한편으로는 소련과 협상을 지속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퍼싱-II와 순항 미사일의 배치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이중결정’). 재무장을 둘러싼 뒤이은 국제적 긴장과 유럽 사회 내부의 갈등, 즉 ‘핵위기’⁵는 1980년대 전반 유럽 냉전의 향방을 결정지었다(Becker-Schaum 2012, 7-37; Gassert 2011).

애초 NATO의 핵 재무장 관련 문제제기가 서독 사민당 소속의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연방총리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슈미트 총리는 데탕트에 반대하는 냉전 정치가가 전혀 아니었으며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실용적 정치가이자 안보 전문가였던 슈미트는 데탕트를 지속하고 군비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현실적인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을 뿐이다. 당시 정치가들의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인 데탕트와는 무관하게 미국과 소련의 군

5 여기서 사용하는 ‘핵위기’라는 용어는 단순히 안보와 외교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 갈등을 넘어 이 문제 때문에 격화된 일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대결까지를 포함한다(Becker-Schaum 2012, 8).

사 무기 기술은 계속 발전했다. 그 발전의 속도와 자가 발전 메커니즘은 이미 1972년 5월에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전략무기제한 협정(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I을 뛰어 넘었다. 이에 1977년 10월 런던의 한 연설에서 슈미트 총리는 SALT II 협정을 위한 대륙 간 미사일 협상에서 중거리 미사일 문제가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미국과 소련이 그 문제를 협상의 주제로 진지하게 다루도록 촉구했다. 그가 보기에 SS-20의 사정거리가 미치지 않는 미국과는 달리 서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이 ‘소련의 도전’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슈미트 총리는 미국의 무관심을 비판하며 서유럽의 독자적인 안보관점을 내세웠고, 사민당 안팎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방 정치지도자들을 ‘재무장’ 결정으로 견인했다.

애초 슈미트 총리와 그의 후임인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이하 기민련) 소속의 헬무트 콜(Helmut Kohl) 서독 총리가 강조한 소련의 신형 미사일로 인한 서유럽의 핵안보 위협 주장에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의 정치가들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독 정치가들을 따랐던 것은 서독을 여전히 서방 동맹의 일원으로 묶어 독자 행동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고려였다. 서독 정치가들은 분단독일을 볼모로 이루어질 수 있을 미소 두 열강 간의 합의에 대해 두려워했고, NATO 회원국 지도자들은 점점 더 자의식을 키워 가는 서독을 서방 동맹의 틀에서 관리하려면 서독의 안보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Gassert 2011, 58-64). 결국, NATO ‘이중결정’은 1970년대 데탕트로 인해 발생한 서방 국가들 사이의 관

점과 이익의 차이를 봉합하며 회원국들의 새로운 결집을 가능하게 했다(Becker-Schaum 2012, 12).

한편, 소련은 이 NATO 재무장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소련 정치지도부는 1970년대 성공적인 데탕트 외교의 끝에 들이닥친 이 재무장 대결로 다시 수세에 몰렸다고 의식했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의 고삐 풀린 소련 비난과 공세적 성격의 SDI는 소련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소련 지도부가 자신의 수세적 지위와 허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미국의 이데올로기 공세(‘소련은 악의 제국’)와 군사적 압박을 단순히 인습적인 정치 수사로만 간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1980년대 전반 소련 지배 엘리트들은 최고지도자의 공백 속에서 미국과 NATO의 핵 선제공격을 우려해 비상경계령을 발동하며 핵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실제 위기감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1983년은 냉전시기 중 ‘가장 위험한 해’였다(Schild 2013).

2. 평화운동

그러나 이 NATO 재무장 대결과 ‘핵위기’에서 유럽은 전례 없는 대중적 평화운동을 맞이했다. 이 시기 평화운동의 일차적 특징은 1950년대와는 달리 단지 일부 비판 그룹들에 의해서만 전개되는 주변적 현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서독의 경우에는 사민당 내 다수파와 녹색당 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기민련과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이하 자민당) 내에서도 재무장 반대세력들

이 존재했고 교회와 노조 등에서도 비판과 저항은 강했다. 평화운동이 대중적 성격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1960년대 후반 급진좌파 세력이었던 청년세대들의 성장과 결집 덕분이었다.

아울러 NATO 재무장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은 일국적 경계를 넘는 네트워크와 초국가적(transnational) 상호교류를 통해 위세를 더욱 드높였다. 유럽 각국의 평화운동은 연사를 서로 초대하고 유럽 도시 간 동시 다발 또는 연속 평화집회 개최를 조직하며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켰다. 서독을 제외한다면, 반공주의가 비교적 약했던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평화운동은 특히 고양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교회 간 평화평의회(Interkerkelijk Vredesberaad, IKV)’, 영국에서는 ‘핵무장 반대 운동(CND: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이 중심이었다. 1981년 10월 10일 서독의 수도 본에는 35만 명의 시위대가 결집해 “봉기하라! 평화를 위해”라고 외쳤고, 같은 해 11월 21일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4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세계 전역에서 핵무기를 제거하자, 먼저 네덜란드에서부터!”라는 구호 하에 결집했다. 미국의 미사일이 배치되기 시작했던 1983년 10월 유럽 주요도시와 미군 기지 앞에서 시위군중의 수는 급속도로 늘었다.

덧붙여 주로 지식인들이 결집해 있던 유럽핵무장해제(END: European Nuclear Disarmament) 그룹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사가 E.P. 톰슨(E. P. Thompson)과 비판적 사회과학자 켄 코츠(Ken Coates)와 메어리 칼도(Mary Kaldor) 등이 주도한 END에는 동·서유럽의 많은 비판적 지식인들이 참여했다(Thompson 1982, 109-138; Jordan 1997). 이 END의 탈냉전 평

화 선언과 네트워크 활동은 대중운동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주로 대중적 평화운동에 ‘유럽적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 회합이자 여론 환기 선언 활동이었다(Nehring 2012, 220-221). 그렇지만 END는 동유럽과 서유럽 평화세력의 가교로서 반핵 평화운동을 넘어 아래로부터의 탈냉전 운동을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유럽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각별하다. 동유럽의 반체제 지식인들과 서유럽의 비판적 평화운동가들은 이 END의 틀에서 탈냉전의 지혜들을 모으고 경험을 교류하며 새로운 유럽을 같이 꿈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당시 유럽 평화운동이 이 재무장을 미국과 소련, 즉 두 열강 사이의 갈등이 빚은 결과로서 두 열강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유럽이 희생된 상황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서독 평화운동은 독일과 유럽이 사실상 미국과 소련, 특히 미 제국주의의 유사-식민지 상태에 놓인 것으로 간주해 격렬히 저항했다. 애초 슈미트 총리와 유사하게 그들은 양 열강, 특히 미국으로부터 독일과 유럽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슈미트 총리와는 반대로 그들은 그 유사-식민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재무장을 중단하고 미국과 소련이 지배하고 조종하는 군사동맹체제 자체를 혁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 유럽 평화운동이 안보나 외교 또는 평화 문제를 넘어 서구 민주주의 자체를 의문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회경제 체제나 정치제도와 관련해서 소수파가 ‘제3의 길’을 주장하긴 했지만, 대다수 평화운동 세력에게 서구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이미 기본전제로 수용되었고 그것에 대한 자의식도 남달랐다.

결국 NATO 재무장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유럽 평화운동은 성공사례로 보기 어렵고, 유럽 평화운동이 냉전 해체에 직접 큰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1980년대 전반 유럽의 대중적 평화운동은 1984-85년부터 진행된 미소 간 군축 대화와 탈냉전의 분위기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984년 레이건은 미국과 유럽의 핵무장 중지요구의 강력한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에서 고르바초프라는 개혁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유럽의 평화지향을 빼고 보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1950년대와는 달리 유럽 여론은 냉전을 끝내기를 촉구했는데 그 근간에는 완강하며 광범했던 수년 간의 대중적 유럽 평화운동이 버티고 있었다(슈퇴버 2008, 204-205; Becker-Schaum 2012, 31-32). 요컨대, 유럽 평화운동은 이미 냉전 종식의 새로운 정신과 심성을 준비했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이 1985년에 이미 군축 협상을 이루어 내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유럽이 점차 두 열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NATO 재무장의 요구도 그랬고 그 재무장에 대한 반대운동에서도 유럽은 이제 자신의 독자적 목소리를 높여 갔다. 특히 197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과 헬싱키-프로세스를 통해 역동성을 갖게 된 정치지도부 간의 접촉과 협력에 더해 점차 동·서유럽의 평화운동과 인권운동 간의 대화와 교류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었다. 물론, 그 ‘아래로부터의’ 진영 초월적 대화와 교류가 갈등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⁶ 그렇지만 그것은 서유럽 정치가들과 평화운동가들에게 탈냉전의 희망과 동유럽에 대한 연

대를 자극할 만했고, 동유럽 반체제 운동가들과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유럽 의식과 변화의 갈망을 불어 넣기에 충분했다(Becker-Schaum 2012, 32).

V 유럽 냉전의 해체

1. 1989년 혁명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냉전이 해체된 것 또한 아직까지는 유럽의 특수성이다. 1989년 봄부터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공산국가들은 반체제 민주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Dalos 2009; Florath 2011). ‘1989년 혁명’은 루마니아를 제외하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아울러 1991년에는 결국 소련 ‘제국’이 붕괴되었다. 1989년에서 1991년까지의 민주적 평화혁명의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 헬싱키-프로세스를 통한 유럽 국제정치 체제의 안정 그리고 동유럽 공산주의의 정치 정당성 결여에 대한 인식의 확대였다. 체제비판의 확대에 기초한 평화적 체제이행의 관점에서 보면 1989년 11월 9일의 베를린 장벽

6 동유럽 반체제 운동가들이 보기에 서유럽 평화운동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군축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동유럽 반체제 운동의 가장 화급한 문제는 인권과 민주적 권리의 확보였고 평화는 그 다음 과제였다. 또한, 서유럽 평화운동가들에게는 NATO의 재무장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지만 동유럽 반체제 운동에선 NATO만이 아니라 자국의 소련군 주둔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Rainer Eckert 2012, 206).

붕괴보다는 1989년 4월 폴란드의 ‘원탁회의’를 통한 민주적 정권 교체 준비가 더 상징적인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Roberts 2010, 529-532). 동유럽 공산주의자들은 더 이상 억압이나 폭력을 통해 지배를 유지할 명분도 없었고 자신감도 갖지 못했다.

‘1989년 혁명’에서 동유럽 ‘인민(people)’들은 스스로 단체와 조직을 결성하며 ‘시민사회’를 만들어 냈고 그 속에서 다양한 열망과 지향을 강령적 요구로 전환하는 능동적인 정치주체로 변신했다(Jarausch 2009, 25-45). 불투명하고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단호히 생애사적 모험을 걸고 때로는 고통을 감내했던 동유럽의 반체제 운동가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 거리로 나섰던 주민들이야말로 20세기 후반의 오랜 유럽 냉전을 끝낸 주역들이었다. 유럽 냉전 종언의 정치적 형식과 공식선언이야 국제정치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은 중년의 신사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실제 역사의 주인공은 거리와 광장에 모인 ‘20세기 상-퀼로트’들이었다.

그런데 1989년 ‘평화혁명’은 일국적 차원을 넘어 기본적으로 ‘유럽혁명’이었다. 혁명이 초국가적으로 진행되며 유사한 방식과 동시적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억압의 성격과 주체가 동일해서만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유럽의 반체제 운동 세력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접촉과 연루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동유럽 국가의 반체제 운동가들은 학생시절의 유학이나 친교관계와 직업상의 접촉 및 사적여행에 더해 체제 비판의 사상과 활동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Weißhuhn, 2011, 187-196).

국가별 정치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유

럽 반체제 세력은 이미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며 쌍방향의 전이를 통해 동시 혁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89년을 ‘초국가적 시기’로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바로 1989년 혁명으로 단순히 일국 차원의 민주혁명과 체제이행을 넘어 소련 지배하의 군사동맹체제를 함께 극복하며 새로운 지역 공동의 질서를 창출하고 안정적 통합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역사적 연루와 전이 및 동시적 발전과 경험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1989년 동유럽 정치격변이 곧장 유럽 냉전의 해체로 직결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었다. 비록 공산주의 체제의 일당 지배가 종식되었다고 해도,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제국’으로부터 벗어나 ‘서방으로의 길’을 무사히 —다시 말해 평화적으로— 걸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고르바초프 효과’가 결정적이었다. 신임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대내적으로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을 천명했고,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했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선택의 자유’가 있다며 주권의 회복을 보장했다. 물론 그것이 곧장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동유럽의 이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노선을 따라 갱신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유로운 재결속을 지향하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무력을 통한 개입의 포기를 선언한 것임에는 분명했다. 그리고 동유럽 민주혁명이 곧장 유럽 냉전의 해체로 귀결된 데에는 이 고르바초프의 불개입 원칙이 결정적이었다(Kramer 2005, 179-194).

고르바초프와 유럽의 관계는 상호적인데다 복잡적이었다. 먼

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전략의 배경에는 유럽의 역할 또한 미국의 압박 못지않게 중요했다. 1980년대 전반 레이건의 반소 공세가 소련을 위축시켰고 궁지로 내 몬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이 곧장 미국의 강경 노선에 소련이 굴복해 냉전이 해체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고르바초프는 미국의 압력 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통찰력에 의거해 행동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르바초프는 1970-80년대 유럽의 데탕트 정치와 평화운동이 만들어낸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의 조건과 가능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억압적 지배의 반작용과 군사 블록을 초월한 평화형성의 긴급성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야말로 그의 외교구상과 안보전략의 근간이었다. 서방, 특히 서유럽의 평화정치와 대중적 평화 갈망은 소련 지도부의 ‘신사고’ 등장을 촉진하고 보조했던 핵심 요인이었다(Loth 1998, 273-278).

특히 1987-88년 등장한 고르바초프의 ‘유럽공동의 집’ 구상은 인상적이다(Rey 2008, 23-35). 1987년부터 고르바초프는 수차례 자신의 참모들에게 서유럽 없이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서유럽의 역할에 대해 전면 새롭게 주목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고르바초프는 “우리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 차이, 즉 진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두 유럽인으로서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서로 통합되어 있다. 우리는 공동의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Rey 2008, 29). 소련 지도부의 이런 (서)유럽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결속에 대한 전망에 서유럽 정치가들도 기꺼이 조응했다. 소련과 서유럽의 지도적 정치가들은 빈번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공

동의 이익을 모색했다(Cox 2008, 16). 고르바초프는 서유럽의 사회 민주주의적 발전을 향후 개혁 소련의 지향으로 그렸고 범유럽적 틀에서 공동의 개혁 사회주의의 미래를 꿈꾸었다.⁷ 그런 점에서 1989년 (서)유럽은 동유럽 주민들에게 만큼이나 고르바초프에게도 현실적 협력의 새로운 대상이자 미래전망의 방향키였다(Zubok 2005, 156-158). 유럽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오랜 문제, 즉 냉전 대결의 극복 조건과 요인들을 마련했다.

2. 독일통일

독일분단은 유럽 냉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결과에 가깝다. 그렇기에 독일문제는 민족적 정체성의 강화나 민족주의 동원에 기초한 ‘독일적 해결’보다는 ‘유럽적 해결’ 또는 유럽통합의 전망 속에서 비로소 가능했다. 1970-8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이 독일통일을 전면 유보하고 오히려 동서 양진영의 화해와 협력의 진전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1989-90년 독일통일이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붕괴를 통한 유럽 냉전 해체의 직접적 결과였음은 당연해 보인다.

아울러 II절에서 언급했던 독일분단과 유럽 냉전의 구조적 특징이 해체되면서 독일은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즉, 동서독 사이의 세력 불균형과 동·서유럽 간 세력균형의 동시성이

7 물론, 1985년에서 1989년 사이 고르바초프의 개혁 구상은 아직 모호했다(Zubok 2005, 150-156). 당시 그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자였고 범유럽주의 신념과 서구주의 지향을 발전시켜가고 있었을 뿐이다.

해소된다면 독일분단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1980년대 후반 동독은 소련과의 경제협력과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소련은 내부 체제개혁에 몰두하면서 더 이상 동독의 경제적 후원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독일문제에 대해 “역사가 결정할 것이다”라며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Biermann 1997, 124-127). 결국, 소련이 동독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자 동독의 자생력은 사라졌다. 동독은 급속히 국가위기에 빠져들었고 체제전환에 내몰렸다.

그러나 유심히 보면 동독 정권의 붕괴가 곧장 독일통일로 귀결된 데에는 구조적 요인 못지않게 행위자의 역할도 컸음을 알 수 있다. 동독 정권 붕괴 후 독일통일로의 귀결은 무엇보다 독일인과 유럽인들의 작품이었다. 미국 정치지도부의 서독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고르바초프의 독특한 역할, 즉 독일문제에 대한 주저와 방관⁸도 중요하지만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부터 1990년 10월 3일까지의 독일통일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바로 콜 총리를 비롯한 서독의 정치지도자들이었다. 특히 콜 총리는 신중함과 단호함을 병행하며 통일 논의를 주도했다(Lee 2010, 77-115; 이동기 2010). 그는 1989년 11월 말에는 아직 ‘국가연합’을 통한 일정한 이행기를 전제한 통일 과정을 제시했지만 곧 동독의 정세변화를 감지하고는 1990년 1월 중순 급속

8 고르바초프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장기적 전망이 부족했으며 상황을 휘어잡을 수 있는 추진력과 결단력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Zubok 2005, 147-156). 특히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그는 독일의 자주적 주권을 인정할 것과는 별도로, ‘역사가 결정할 것이다’고 말하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적 제안과 정치행위를 통해 상황을 주도하려 하지 않았다(Biermann 1997, 124-127).

한 흡수통일로 방향을 선회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도 그 나름의 유럽 구상을 통해 콜의 통일 정책과 결정을 견제하면서도 수용했다. 아울러 1990년 10월의 독일통일 선언과 11월 '새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 선언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그 동안의 수많은 유럽 정치가들의 대화와 협상의 경험과 지혜가 발휘되는 시간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독일통일과 냉전 해체 과정에 유럽인들이 수행한 역할은 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Bozo, 2008). 특히 독일문제 해결과 유럽 냉전 해체 과정에서 항상 통합 유럽 구상은 북극성 같은 역할을 수행했는데, 유럽의 지도적 정치가들이 바로 그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방향키를 제시할 수 있었다.

요컨대, 서유럽의 긴장완화 정치와 동·서유럽 간 대화와 협력은 곧장 유럽 냉전을 종결짓지는 못했다. 그것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라는 개혁가의 등장과 동유럽 민주화 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냉전 해체에 작용했을 뿐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유럽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동유럽 반체제 운동가들과 주민들에게 유럽이란 새로운 희망과 기대의 근거로 기능했다. 이때 서유럽은 무엇보다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넘어 사회적 안정과 물질적 번영의 매력을 통해 동유럽 전반의 변화를 추동했다(Young 2010, 308-310). 그 '전환'의 국면에서 서독정치가들의 능동적 정치행위는 평화적 체제전환과 민주적 통일을 가능케 했다. 독일통일도 유럽 냉전 해체도 모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유럽인들의 성취였다.

VI 맺는말: '탈냉전' 유럽, 끝나지 않은 이야기?

냉전기 유럽은 NATO와 WTO 양 동맹체제의 핵무장 대결을 배경으로 해 일찍부터 위기를 경험했다. 비록 비유럽 지역의 열전이나 폭력현상과는 그 진폭이 달랐지만, 2차대전의 가장 격렬한 전장이었던 유럽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대결과 체제경쟁의 가장 직접적인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에 더 쉽게 사로잡혔다. 그런 배경 속에서 유럽인들은 냉전 형성과 —독일분단을 포함해— 강화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과 소련의 압박과 규정, 유인과 지원이 항상 따라 다녔지만, 유럽은 동맹체제 형성과 유지 및 재구축에서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인지와 실천을 자주 보였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능동성이 더 적극적으로 발현된 것은 동방 정책과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한 데탕트 정치와 아래로부터의 평화운동이었다. 1961년 브란트의 말대로, 유럽인들은 역사에는 '항상 필연적인 한가지 길 이상의 것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었다. 독일의 긴장완화 정책과 헬싱키-프로세스는 미국과 소련의 지원이나 양해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유럽의 성취였다. 더욱이 1940년대 후반부터 이미 다양하게 존재했던 유럽 평화구상과 탈냉전 노력에 다 N+N 국가들이 확보했던 '평화공간'까지 함께 헤아리면 유럽에서 냉전은 항상 '잠복된 평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럽 냉전을 '장기평화'나 '영속갈등의 상대적 안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의미에서만 정당한 것이 아니다. 유럽 냉전의 발전사는 위기나 공포를 넘어

대안적인 평화구상과 현실적인 평화정치와 구체적인 ‘탈냉전’의 성취가 함께 따랐다. 그렇기에 유럽 냉전은 열전과 비교되는 ‘상상의 전쟁’으로서의 냉전 양상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평화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유럽의 ‘탈냉전’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 유럽 냉전의 해체형식과 통합유럽의 건설방식에서 유럽인들이 모두 동일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독일의 NATO 가입문제와 NATO가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대안들이 존재했지만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는 그 후 ‘탈냉전’ 유럽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를테면, 최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충돌과 러시아와 미국-유럽 간의 이익갈등은 1989-90년 유럽 ‘탈냉전’ 과정이 남긴 불운한 ‘냉전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토니 주트는 1989년 당시 동유럽 주민들에게서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유럽”이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요약했다(주트 2008, 1039). 그가 말한 ‘유럽’은 초민족적 공동체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복리와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평등과 연대 지향적인 독특한 유럽적 — 미국식과는 구분되는 — ‘삶의 방식’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그 지향과 희망은 유럽 냉전의 해체 후 냉혹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사회경제 현실에 부딪혀 새로운 굴절을 겪었다. ‘역사의 종언’이나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 신화는 애초부터 그들의 욕구와 삶의 현실을 포괄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나섰고, 그들 나름의 오랜 삶의 가치와 문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테면, 동독의 ‘오스탈기(Ostalgie)’ 현상은

통일 후 오히려 동독 지역주민들이 집단적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고 전승하고 있음을 드러낸다(Ahbe 2005; 이동기 2015).⁹ 심지어 동유럽 주민들 사이에서도 탈냉전의 과정과 ‘그 후’의 현실적 삶 그리고 기억과 갈망은 매우 이질적이다.

다른 한편, ‘장벽’이 무너지고 ‘장막’이 걷어짐에 따라 동유럽과 서유럽의 주민들은 비로소 그들이 얼마나 다른 냉전 기억과 ‘탈냉전’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동유럽 주민들과는 달리 서유럽인들에게 냉전시대는 군사동맹체제의 대결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보면 무엇보다 ‘황금기’였다. 그러나 자유-사회(liberal-social) 민주적 합의사회에서 향유했던 물질적 복리와 사회적 안정은 이제 서유럽 주민들에게도 ‘지난 일’로 보인다. ‘철의 장막’이 만들어낸 근대화 성장의 가파른 경쟁은 적어도 서유럽 사회에겐 복지와 안정의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제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확장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군사적 대결체제나 구조로서의 냉전은 유럽에서 사라졌지만 ‘그 후’ 확인되거나 생성되는 냉전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과 (탈)냉전기 생애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새롭게 인지되거나 전승됨으로써 갈등과 배제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유럽에서도 기억과 경험으로서의 냉전은 아직도 그 영향력을 발

9 동독 주민들의 오스탈기(Ostalgie는 Ost와 Nostalgie의 합성 조어로서 옛 동독에 대한 향수를 의미)는 구동독의 체제에 대한 회귀나 공산주의 억압의 정당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또 정치적 좌파로의 결집 같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동원의 근간이 되는 정치적 정체성과는 달리, 생활문화에서 자의식과 고집(Eigensinn)을 유지하는 문화적 정체성이다. 더 익숙하며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옛 동독 생필품과 기호품에 대한 집착과 재발견(‘우리 것도 다 나쁘지는 않았어!’, ‘서독보다 우리 것이 더 좋아!’)을 통해 갖는 집단적 결집이자, 새로운 위협적 사회체제와 삶의 방식에 대한 동독 주민들 나름의 대응전략이다.

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럽 '탈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한때 무지갯빛으로 발하던 유럽의 정치통합은 정체되고 있으며 새로운 위기와 갈등들이 발현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깃발 아래 통합적 유럽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도 사라졌다. 유럽 통합의 지체는 기본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들 이닥친 사회경제적 현실의 격차와 다양한 정치적 갈등요인을 조정 하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오랜 기간 이질적으로 가진 냉전 경험의 문화적 소통의 결여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에서 '탈냉전'의 과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 면 '탈냉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새롭게 질문할 때가 되었는지 도 모른다. 그렇게 유럽 냉전 '해체' 25주년이 다가왔다.

참고문헌

- 권현익 저·이한중 역. 2013a.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민음사.
- 권현익. 2013b. “냉전의 다양한 모습.” 『역사비평』. 105호, 221-234.
- 베른트 슈퇴버 저·최승완 역. 2008.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1945-1991』. 서울: 역사비평사.
- 이근욱. 2012. 『냉전. 20세기 후반의 국제정치』.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이동기. 2010. “더 나은 통일안’은 없었는가? : 1989/90년 헬무트 콜, 국가연합 그리고 독일 통일.” 『독일연구』. 제20호, 77-115.
- _____. 2013a.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 서울: 아카넷.
- _____. 2013b. “브란트. 민주사회주의와 평화의 정치가.”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 『지도자들. 성공과 실패의 역사에서 찾는 리더의 조건』, 125-168.
- _____. 2014a. “평화사관 무엇인가.” 『역사비평』. 106호, 16-36.
- _____. 2014b. “결코 사라지지 않을 동독.” 『한겨레21』(11월 20일), 78-80.
- 이수형. 201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론, 역사, 쟁점』.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존 루이스 개디스 저·박건영 역. 2002.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서울: 사회평론.
- 토니 주트 저·조행복 역. 2008. 『포스트워 1945-2005. 2』. 서울: 플래닛.
- _____. 2014. 『재평가. 잃어버린 20세기에 대한 성찰』. 서울: 열린책들.
- 한국서양사학회 편. 2009. 『유럽 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서울: 푸른역사.
- Ahbe, Thomas. 2005. *Ostalgie. Zum Umgang mit der DDR-Vergangenheit in den 1990er Jahren*. Erfurt: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hüringen.
- Bald, Detlef and Wolfram Wette (eds.). 2008. *Alternativen zur Wiederbewaffnung. Friedenskonzeptionen in Westdeutschland 1945-1955*. Essen: Klartext Verlag.
- _____. 2010. *Friedensinitiativen in der Frühzeit des Kalten Krieges 1945-1955*. Essen: Klartext Verlag.
- Becker-Schaum, Christoph, Philipp Gassert, Martin Klimke, Wilfried Mausbach and Marianne Zepp (eds.). 2012. “Entrüstet euch!” *Nuklearkrise, Nato-Doppelbeschluss und Friedensbewegung*.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 Biermann, Rafael. 1997. *Zwischen Kreml und Kanzleramt: Wie Moskau mit der Einbeit rang*.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 Bozo, Frederic, Marie-Pierre Rey, N. Piers Ludlow and Nuti Leopoldo (eds.). 2008. *Europe and the End of the Cold War*. London; Routledge.
- Cox, Michael. 2008. “Who won the Cold War in Europe? A historiographical

- overview," in Bozo, Frederic, Marie-Pierre Rey, N. Piers Ludlow and Nuti Leopoldo (eds.). *Europe and the End of the Cold War*, 1-12. London: Routledge.
- Dalos, György. 2009. *Der Vorhang geht auf. Das Ende der Diktaturen in Osteuropa*. München: C.H. Beck.
- Dülffer, Jost. 2006. "‘Self-Sustained Conflict’- Systemerhaltung und Friedensmöglichkeiten im Ost-West-Konflikt 1945-1991," in Cornina Hauswedell (ed.). *Deeskalation von Gewaltkonflikten seit 1945*, 33-60. Essen: Klartext Verlag.
- _____. 2004. *Europa im Ost-West-Konflikt 1945-1990*, München: Oldenbourg.
- Eckert, Rainer. 2012. "Die unabhängige Friedensbewegung in der DDR," in Becker-Schaum, Christoph, Philipp Gassert, Martin Klimke, Wilfried Mausbach and Marianne Zepp (eds.). "Enträstet euch!" *Nuklearkrise, Nato-Doppelbeschluss und Friedensbewegung*, 200-212.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 Florath, Bernd (ed.). 2011. *Das ReVolutionsjahr 1989. Die demokratische ReVolution in Osteuropa als transnationale Zäsu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Gaddis, John Lewis. 1987.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llus, Alexander. 2006. *Die Neutralisten Verfechter eines vereinten Deutschland zwischen Ost und West 1945-1990*. Hamburg: Droste.
- Gassert, Philipp, Tim Geiger and Hermann Wentker (eds.). 2011. *Zweiter Kalter Krieg und Friedensbewegung: Der NATO-Doppelbeschluss in deutsch-deutscher und internationaler Perspektive*. Oldenbourg: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 Geyer, Michael. 2001. "Cold War Angst: The Case of West-German opposition to Rearmament and Nuclear Weapons," in Hanna Schissler (ed.). *The Miracle Years: A Cultural History of West Germany, 1949-1968*, 376-40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nhimäki, Jussi M. 2010. "Detente in Europe, 1962-1975,"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I. Crises and Detente*, 198-2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mann, Arne. 2007. *The Emergence of Detente in Europe. Brandt, Kennedy and the formation of Ostpolitik*. London: Routledge.
- Iriya, Akira (ed.). 2014. *Global Interdependence. The World after 194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arausch, Konrad. 2009. "Kollaps des Kommunismus oder Aufbruch der Zivilgesellschaft? Zur Einordnung der friedlichen ReVolution von 1989," in Eckart Conze, Katharina Gajdukowa and Sigrid Koch-Baumgarten (eds.). *Die demokratische ReVolution 1989 in der DDR*, 25-45. Köln: Böhlau.
- Jordan, Gerhard. 1997. *European Nuclear Disarmament. Der "END-Prozess" und sein Beitrag zum Ost-West-Dialog der unabhängigen Friedensbewegungen Europas in den 80er-Jahren*. Diplomarbeit am Institut für Zeitgeschichte der Universität Wien.
- Kaldor, Mary. 1990. *The Imaginary War: Interpretation of East-West Conflict in Europe*. Oxford: Blackwell.
- Kramer, Mark. 2005. "Gorbachev and the demise of east European communism," in Silvo Pons and Federico Romero (eds.). *Reinterpreting the End of of the Cold War: Issues, interpretations, periodizations*, 179-200. London: Frank Cass.
- Lee, Dong-Ki. 2010. *Option oder Illusion. Die Idee einer nationalen Konföder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1949-1990*. Berlin: Ch. Links Verlag.
- Lenke, Michael. 2001. *Einheit oder Sozialismus? Deutschlandpolitik der SED 1949-1961*. Köln: Böhlau.
- Loth, Wilfried. 1985. "Der Koreakrieg und die Staatswerdung der Bundesrepublik," in Josef Forschepoth (ed.). *Kalter Krieg und deutsche Frage. Deutschland im Widerstreit der Mächte 1945-1952*, 335-36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_____. 1990. *Der Weg nach Europ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_____. 1994. *Stalins ungeliebtes Kind. Warum Moskau die DDR nicht wollte*. Berlin: Rowohlt.
- _____. 1998. *Helsinki, 1. August 1975. Entspannung und Abrüstung*.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_____. 2007. *Die Sowjetunion und die deutsche Frage. Studien zur sowjetischen Deutschlandpoliti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Mitchell, Nancy. 2010. "The Cold War and Jimmy Carter,"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II. Endings*, 66-8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eller, Wolfgang. 2009. "Kalter Krieg, Neutralität und politische Kultur in Österreich."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 No. 2, 11-19.
- Nehring, Holger. 2012. "Transnationale Netzwerke der bundesdeutschen Friedensbewegung," in Becker-Schaum, Christoph, Philipp Gassert, Martin Klimke, Wilfried Mausbach and Marianne Zepp (eds.). "Enträstet euch!" *Nuklearkrise, Nato-Doppelbeschluss und Friedensbewegung*, 213-228.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 _____. 2013. *Politics of Security: British and West German Protest Movements*

- and the Early Cold War, 1945-197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iedhardt, Gottfried. 2010. "Der Ost-West-Konflikt. Konfrontation im Kalten Krieg und Stufen der Deeskalation,"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50, 557-594.
- Nünlist, Christian. 2010. "Wir und sie: Die Welt spaltet sich in zwei Lager," in Damals (ed.). *Der Kalte Krieg*, 13-24.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Rey, Marie-Pierre. 2008. "Gorbachev's New Thinking and Europe, 1985-1989," in Bozo, Frederic, Marie-Pierre Rey, N. Piers Ludlow and Nuti Leopoldo (eds.). *Europe and the End of the Cold War*. London; Routledge.
- Roberts, Adam. 2010. "An 'incredibly swift transition',"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II. Endings*, 513-5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ld, Georg. 1983. *Das gefährlichste Jahr des Kalten Krieges*.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 Schmidt, Wolfgang. 2001. *Kalter Krieg, Koexistenz und kleine Schritte: Willy Brandt und die Deutschlandpolitik 1948-1963*.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 Scott-Smith, Giles and Hans Krabbendam (eds.). 2003. *The Cultural Cold War in Western Europe 1945-1960*. London: Routledge.
- Schwarz, Hans-Peter. 2010. "The division of Germany, 1945-1949,"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II. Endings*, 289-31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ppo, Hentila, 2006. *Neutral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Finnland und Deutschland im Kalten Krieg*. Berlin: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 Stöver, Bernd. 2007. *Der Kalte Krieg. Geschichte eines radikalen Zeitalters 1947-1991*. München: C.H. Beck Verlag.
- Suppan, Arnold and Wolfgang Mueller (eds.). 2009. "Peaceful Coexistence" or "Iron Curtain". *Austria, Neutrality, and Eastern Europe in the Cold War and Detente, 1955-1989*. Wien: LIT Verlag.
- Thompson, E. P.. 1982. *Beyond the Cold War. A New Approach to the Arms race and Nuclear Annihilation*. New York: The Merlin Press.
- Weißhuhn, Reinhard. 2011. "Die ungarische demokratische Opposition und ihre Kontakte zur DDR-Opposition," in Bernd Florath (ed.). *Das ReVolutionsjahr 1989. Die demokratische ReVolution in Osteuropa als transnationale Zäsur*, 187-19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Werner, Michael. 2006. *Die Ohne mich-Bewegung. Die bundesdeutsche Friedensbewegung im deutsch-deutschen Kalten Krieg (1945-1955)*. Münster: MV -Wissenschaft.
- Westad, Odd Arne. 2007.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The New International History of the Cold War: Three (Possible) Paradigms." *Diplomatic History* 24, 551-565.
- Young, John W. 2010. "Western Europe and the end of the Cold War, 1979-1989,"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II. Endings*, 289-31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ubok, Vladislav. 2005. "Unrapping an enigma: Soviet elites, Gorbachev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 Silvo Pons and Federico Romero (eds.). *Reinterpreting the End of the Cold War: Issues, interpretations, periodizations*, 137-164. London: Frank Cass.

필자 소개

이동기 Lee, Dong-Ki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Department of Histo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교수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학사, 독일 예나대학교 역사학 박사

논저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 “Option oder Illusion. Die Idee einer nationalen Konföder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1949-1990”, 「브란트. 민주사회주의와 평화의 정치가」, 「디터 쟁하스의 평화론: 문명화의 복합구성」.

이메일 leedk@gwnu.ac.kr